
글로벌정책리포트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이윤식 수석연구위원

마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전략

- 관리된 경쟁과 공급망기술패권동맹재편 중심 -

2026년 8월 6일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 관리된 경쟁과 공급망·기술패권·동맹재편 중심 -

2026. 8. 6. (목) 통일외교사회정책실장 이 윤 식

-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무역갈등을 넘어 반도체·AI·핵심광물·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으로 확장되며, 국제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중
 -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방식을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으로 전환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 향후 미·중 관계 역시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경제적 강압, △동맹의 경제안보화 등 한국에 새로운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음
 - 경제안보 시대 국가경쟁력은 생산 규모보다 핵심기술과 전략산업, 공급망 회복력 확보에 의해 좌우되는 새로운 경쟁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공급망·첨단기술·산업정책·외교안보를 통합하는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안별 대응에 머물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요구되는 전략적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및 산업통상 정책을 통합하는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하는 것임
 - 이에 우리는 ①「국가경제안보 기본법」 제정, ②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③공급망 회복력 강화, ④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⑤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고도화, ⑥경제적 강압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Grand Strategy’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미·중 정상회담, 경쟁 완화인가 vs. 전략적 휴전인가

-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와 무역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반도체·AI·핵심광물·에너지·글로벌 생산망을 둘러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음
 - 세계 경제는 효율성 중심의 분업체제에서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과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질서로 빠르게 재편 중
 -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은 경제성장의 수단을 넘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

-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로 관리하기로 하고, △희토류·핵심광물 공급, △미국산 농산물 구매, △ 무역·투자위원회 설치(5.16)」 등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 기대를 높였음
 - 그러나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통제와 대만 문제를 비롯한 구조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후속 협상으로 이월
 -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농산물 구매 약속의 이행을 압박하고, 중국은 핵심광물과 시장 접근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
- 9월 개최 예정인 후속 정상회담 역시 구조적 경쟁을 해소하기보다 5월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큼
 - 이렇게 볼 때, 향후 미중 관계는 제한적 협력과 분야별 충돌이 교차하는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
 - ※ 관리된 경쟁: 전략적 충돌의 확산은 억제하되, 공급망·첨단기술·핵심광물 등 핵심적 국가 이익이 걸린 분야에서는 경쟁과 압박을 지속하는 관계 관리 방식
- 문제는 미중 간 ‘휴전과 재충돌’이 반복될수록 한국의 경제안보 위험과 선택 압력도 함께 커진다는 점
 -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하면서도, 높은 對中 교역(약 21%) 및 생산망 연계성(80%)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동시 노출
 - 반면 반도체·조선·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으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기반 약화와 중국시장 축소·보복 가능성이란 부담도 병존
- 이재명 정부는 ‘실용균형 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미중 경쟁이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도 공급망·첨단기술·전략산업·동맹정책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략적 표류’를 거듭하고 있음
 - 외교·안보와 산업·통상정책을 통합하기보다 사안별 대응에 머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이런 접근으로는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어렵고, 전략산업의 기회를 국가경쟁력과 협상력으로 전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는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관리된 경쟁’의 구조적 특징과 9월 후속 정상회담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同 변화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과 당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II. 5월 정상회담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재편

- ‘충돌’ 에서 ‘관리된 경쟁’ 으로 -

- 미·중 전략경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장기 경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 미국은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반도체·AI·양자기술·첨단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지속 확대
 - 중국도 △희토류·핵심광물 수출관리, △전략산업 육성, △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력을 외교안보의 영향력으로 적극 활용
 -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상대국과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 핵심 분야의 의존도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쟁구조가 고착화
- 5월 미·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경쟁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양국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하고,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희토류·핵심광물 공급 안정,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시장 접근 개선 및 일부 비관세장벽 완화 등 제한적 경제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 이는 양국 간 상호 피해가 큰 ‘전면 충돌’을 방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
 - 그러나 △반도체·AI·첨단기술 통제, △산업보조금, △대만 문제 등 패권경쟁의 핵심 의제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구조적 갈등은 그대로 유지
-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중 양국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관리된 경쟁’ 체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농산물 구매 등 5월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AI·반도체·첨단산업 관련 기술통제를 유지하며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지속
 - 중국도 희토류 수출관리와 전략산업 보호정책을 유지하면서 공급망과 핵심광물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첨단기술의 자립과 내수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
 - 결국 양국은 경제협력 채널은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에서는 경쟁을 지속하는 ‘이중적 구조(dual track)’를 형성
- 9월 개최가 예정된 후속 정상회담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양국은 희토류 공급, 미국산 농산물 구매, 시장 접근 확대 등 5월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
 - 반면, △반도체·AI·양자기술, △대만문제 등 전략적 경쟁 분야에선 양국 모두 ‘비타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9월 회담은 패권경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경쟁의 속도와 충돌의 강도를 조절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성격이 강할 것으로 전망

○ 미중 전략경쟁은 앞으로도 협력과 충돌이 공존하는 '관리된 경쟁' 체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상호의존은 유지하되,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분야에서는 경쟁을 지속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정착
-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도 공급망·첨단기술·동맹을 통합·관리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미중 경쟁은 전략산업과 동맹 중심의 장기 경쟁으로 재편될 전망
- 5월 정상회담은 패권경쟁의 종식이 아닌 경쟁 방식을 '충돌'에서 '관리'로 전환한 분기점으로, 향후 국제질서도 '관리된 경쟁'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표 1] 미중 전략경쟁의 진화와 '관리된 경쟁'

	무역전쟁 단계	경제안보 경쟁 단계	관리된 경쟁 단계
주요 시기	트럼프 1기 이후	바이든 정부~트럼프 2기 초반	2026년 5월 정상회담 이후
경쟁 중심	관세·무역수지	공급망·첨단기술·핵심광물	전략적 경쟁과 제한적 협력의 병존
주요 수단	고율관세	수출통제·투자심사·산업보조금	분야별 통제·정상 외교·거래형 합의
미국 전략	대중 무역적자 축소	중국의 기술굴기 억제	기술우위 유지와 공급망 안정 병행
중국 전략	보복관세	기술 자립·핵심광물 통제	공급망 지배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
특징 및 키워드	강대강 통상충돌 (무역전쟁)	선택적 디커플링 (경제 안보)	휴전과 재충돌이 반복 (관리된 경쟁)

III. 관리된 경쟁시대, 한국의 경제안보와 이재명 정부의 한계

①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고착

○ 미중 전략경쟁이 '관리된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회복력을 우선하는 구조로 재편

- 중국은 희토류·갈륨·흑연 등 핵심광물의 공급 통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은 첨단 반도체·AI·투자규제를 지속하면서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 이에 따라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동안 반복될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중국산 핵심광물과 중간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에 직접 노출된 구조
 - 희토류와 일부 핵심 소재는 단기간 내 대체가 쉽지 않아 중국의 수출관리 강화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
 - 미국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미국의 기술통제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

② 기술패권 경쟁은 한국 전략산업의 새로운 기회

- 미중 경쟁의 중심은 관세에서 AI·반도체·양자기술·첨단 제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기술우위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
 - 미국은 첨단기술 통제와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공동 연구·공동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과 전략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
-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
 - 한국은 AI·반도체·HBM·조선·방산·원전·전력기기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은 현재 반도체와 조선, 원전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③ 한미동맹의 중심축도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확대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한미동맹은 군사협력을 넘어 공급망·첨단기술·전략산업을 포괄하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동맹의 가치는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기반, 공급망 안정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맹국과의 산업협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 이는 한국에 새로운 부담인 동시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기회
 - 반도체·조선·방산 등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들은 미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자산으로 평가
 - 이에 미국의 요구를 단순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시장 접근 확대, △기술협력, △규제 개선 등 실질적 국익과 연계하는 전략적 협상이 중요

④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이 부재하다는 점

-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공급망·첨단기술·산업정책·외교안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국가대전략: 외교·안보·경제·산업·기술을 개별 정책이 아닌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통합하여 국가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전략
- 공급망 안정과 전략산업 육성 정책은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외교·통상·안보와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
- 또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협상력 제고로 연결하는 장기적 전략과 정책 로드맵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⑤ 종합하면,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에 위기이면서도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경제안보 시대 개별 국가의 경쟁력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핵심기술과 전략산업을 얼마나 확보하고, 공급망 충격에 얼마나 잘 대응할 회복력을 갖추었느냐에 의해 결정
- 따라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의 단순한 균형외교가 아니라, 공급망·첨단기술·산업정책·외교안보를 하나의 국가대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임
- 이러한 국가대전략은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표 2] 미중 전략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환경 변화	한국의 위험	한국의 기회	정책적 과제
공급망 재편	핵심광물 의존	공급망 다변화	전략비축·대체조달
기술패권 경쟁	첨단기술 통제	반도체·AI 경쟁력	기술보호·R&D 확대
경제적 강압	수출·투자 불확실성 확대	신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	경제적 강압 대응체계 구축
동맹의 경제안보화	대미 역할 확대 요구	기술·산업 협력 확대	전략적 협상력 강화
관리된 경쟁	정책 불확실성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국가대전략

IV. Grand Strategy 실현을 위한 ‘7대 정책과제’

- 미중 전략경쟁이 ‘관리된 경쟁’ 체제로 장기화되면서, 외교·안보·경제·산업·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국가대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국가대전략은 경제안보를 국가경쟁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공급망·첨단기술·전략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의미
 -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대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

① 국가경제안보 기본법」 제정

- 경제안보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 핵심 전략산업 및 핵심품목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국가경제안보 기본법」 제정
-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안보 기본계획과 국회 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② 국가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외교·안보·산업·통상·과학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공급망 조기경보, 핵심품목 모니터링, 민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③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핵심광물 확보 전략

- 희토류·리튬·흑연 등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및 재활용 기술 투자 확대
 - ※ 호주·캐나다·베트남·인도 등 우방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의존도를 점차 완화
-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병행 추진

④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반도체·AI·조선·방산·원전·배터리 등을 국가경제안보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연구개발, 세제, 금융, 인력양성, 전력·입지 지원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전략산업을 외교·통상 협상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

⑤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고도화

- 군사동맹을 넘어 반도체·AI·조선·원전·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포괄하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협력 범위 확대

- 미국의 투자 및 역할 확대 요구에는 시장 접근성 개선, 기술협력 확대, 규제 합리화 등을 연계하는 전략적 협상 추진
-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까지 제도화해 전략적 연대 강화

⑥ 경제적 강압 대응체계 구축

- 특정 국가의 수출통제, 통관 지연, 시장 봉쇄 등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범정부 매뉴얼과 조기 대응체계 마련
-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세제·보험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G7 및 주요 우방국과 경제적 강압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제 공조 기반 확대

⑦ 대한민국 Grand Strategy 수립

- 공급망·첨단기술·산업정책·외교·안보·에너지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통합하는 대한민국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
- “육성(Promote) - 보호(Protect) - 협력(Partner)”을 3대 전략축으로 전략산업 육성, 핵심기술 보호,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추진
- 경제안보를 단기 산업정책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국가전략으로 재정립
- 경제안보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핵심기술과 전략산업을 얼마나 확보하고, 공급망 충격에 얼마나 회복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관된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임